도의회, 새만금 예산 복원 호소

단식 투쟁 현장 방문 민주 지도부에 입장문 전달

박광온 원내대표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받은 입장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도의원 릴레이 단식 투쟁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서삼석 예결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게 '잼버리 책임 떠넘기기 및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전주11) 도의회 의장과 윤정훈(무주) 민주 도의회 원내대표, 단식 투쟁 중인 임승식(정읍1), 김성수(고창1) 의원 등은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SOC 예산삭감 폭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지금 새만금은 모든 사업이 중지될 위기에 놓여 있어 예산 복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원내대표의 방침을 정확히 지켜 줄 것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삭발을 단행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정부의 새만금 예산삭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정상 중에서도 가장 비정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새만금은 국토균형발전의 철학과 한국의 미래 영혼이 담긴 사업인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지 않으면 내년 예산심의는 있을 수 없다는 의지로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이날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는 전북도청 1층과 4층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응 활동을 펼쳤다.

/김재훈 기자

"기재부 SOC 예산 삭감은 위법… 감사원 감사해야"

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전북도의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이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행정행위가 위법 소지가 많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 건의했다.

이에 도의회는 김 의원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성수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수 있고, 20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각 중앙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규모,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 할 수 있고, 수정 또는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삭감을 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기재부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살아가는 힘' 길러줘야

김명지 도의원, "기후 위기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갖춰줘야 할 덕목 학교 밖 체험 등 통해 이뤄질 수 있어 전북이 가진 기반 통한 교육과정 마련을"

잼버리 파행처럼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도내 청소년들에게 되물려주지 말고, 심리치유와 자존심 회복 그리고, '살아가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제40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잼버리 파행에 도내 청소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어야 한다"면서 "이들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심 회복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힘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폭염과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 앞에 잼버리 활동이 파행된 것에 참가한 도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심 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로 핑계대며 정부가 잼버리와 전혀 상관없는 새만금 사업 예산의 80퍼센트를 삭감하는 등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인 충격을 줬다는 이유다.

김명지 의원은 "언제까지 우리 전북이 단순히 잼버리 파행과 실패 그리고, 정부의 폭력에 휘둘리고만 있을 것인지, 잼버리 참가 도내 청소년들에 대한 미안함과 철저한 반성은 없는 것인지"라면서 "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충분히 잼버리를 즐기려고 노력했다"면서 "이제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티켓 없이 K-POP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열광했지만, 엉망진창이 된 잼버리를 오로지 K-POP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무능한 정부의 시선이 아닌, 이제는 전북의 시선으로 도내 청소년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에게 "'사후약방문' 일지라도 잼버리 참가 학생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제안하기도 했다.

김명지 의원은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갖춰줘야 할 것은 살아가는 힘"이라면서 "이 힘은 단순히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과 도전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아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실내 환경에 익숙해져 야외활동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과 기반을 통해 경험하고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훈기자

신뢰받는 의회 정립… 도의회,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권익위 청렴연수원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개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반부패 법령 특강

전북도의회는 13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국주영은 의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3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의회 정립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마련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됐다. 문명아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특강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렴특강에 앞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와 청렴한 사회실현에 솔선수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의 수수 및 권한 남용,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공직 수행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다짐했다.

김만기 부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식을 더욱 배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청렴 교육을 통하여 청렴의 가치를 상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께 더욱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청렴·폭력 예방 교육 진행

권익위 설치·운영 관련 법 등에 따라 실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3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우시향 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례분석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이해도를 높였으며,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유형에 대한 설명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법 등에 관해 강의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등 지방의회의 부정부패 예방과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4대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고경윤 의장은 "의원들은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높은 청렴도와 건전한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정읍시의회가 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진실 은폐 규탄"

염영선 도의원, 결의안 발의 "수사 외압 진실 밝혀야" 국회에 특검법 처리 촉구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13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전북의 아들,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게 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원인을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에 이어 영장심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해임도 탄핵도 아닌 자발적 사의를 표명해 이는 진실 은폐를 위한 비겁한 도주 사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의 도주성 사퇴를 재가한다면 이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국회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교육부 장관, 공교육 파탄 책임지고 사퇴해야"

권요안 도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교권 회복 위해 아동학대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해야"

전북도의회가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의 사태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오신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한 사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천 과제도 없고 예산과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효성 없는 맹탕 교육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정부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더 이상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권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학교를 악성민원과 소송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금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정부는 전국 30만 명에 이르는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는 교권 회복과 교육 개혁이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재훈기자